

시민이 만든 '순천생태도시 조례' 청원

내년 1월까지 범시민 서명 운동 5만명 서명 내년 2월 시의회 제출

순천시 5만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이 만든 '순천시 생태도시 조례안'을 입법 청원한다.

23일 순천시 생태도시조례 제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 조례안'을 마련하고 제정 청원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2월 순천시 546명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서는 시민 삶과 생활패턴까지 생태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며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후 시민 주도의 생태도시 조례 제정 100인위

원회가 구성돼 지난 5월30일 별량면 화포해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다양한 연령·계층별로 구성된 '생태도시 조례 제정 100인 위원회'는 '생태도시 조례 제정 시민위원회'로 확대해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와 매주 도시락 토론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수많은 의견을 수렴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시민 공론화와 세부 법률 검토, 관계기관 자문 등을 거쳐 11월 초 기본적인 내용을 완성했다.

이 조례안에는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실천, 생태도시위원회 설치, 시민참여 환경 실천 사업, 시민 및 공무원 생태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민위원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을 위해 시민 5만명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명이 완료

된 조례안은 내년 2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민이 직접 만든 생태도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인 점에서 의미 깊다.

신광래 시민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역할 부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한 생태도시가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만든 생태도시 조례야말로 시가 표방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생태와 교육을 기반으로 경제활력을 이어가는 세계적인 생태경제도시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기자 노트

소멸위험지역 '특례군' 빨리 지정해야



이진택 제2사회부 부국장

13년 전인 2007년 9월 21일 구례 균형 상황실에서는 당시 서기동 구례군수를 비롯한 간부들이 모여 인구 3만명 회복을 위한 신규 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2030년까지 23년 동안 인구정책을 펴 2만8000여명 인구를 3만명으로 2000명 이상 늘린다는 것이 목표였다. 당시 23년간 인구 2000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 대단치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20년 지금, 앞으로 10년 후 구례인구가 3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가능하다"는 말을 내놓지 않는다.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구례군의 현수소를 보자. 10월 말 현재 구례군 가구는 1만3295가구다. 이 중 절반 가량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다. 인구는 2만5578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905명이 줄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 달여 남은 연말까지 더하면 1000명 넘게 줄어든 것이라는 예측이다. 65세 인구는 9305명으로 전체 인구의 36.4%를 차지, 이미 '초고령사회'이다. 90세 이상 인구는 1.6%인 399명으로 이 중 22명은 100세가 넘는다.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0.918명 보다는 다소 높은 1.136명이다.

그러나지역소멸위험지수(20-39세의 가입여성 인구를 65세 인가로 나눈 값)는 0.203이다. 처음 지수를 산출한 2013년에는 0.279였는데 7년 사이에 0.076이 낮아졌다.

위험지수가 0.5 이하일 경우에는 큰 요인이 없는 한 향후 30년 뒤엔 그 지역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0.2 이하가 되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

황을 가르킨다.

구례군은 꾸준한 귀농·귀촌 정책과 농공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구 유입 시책을 펴왔다. 다각적인 출산 정책과 육아 지원, 노인복지 정책 등 인구 늘리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서의 인구감소세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실상가상 지난 5년간 귀농귀촌 인구가 2309명으로 전체 인구의 9.0%에 달했지만, 이 중 30% 가까이는 다시 구례를 떠나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농촌의 실상이며,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다.

지난달 15일 충북 단양군에서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면적 1㎡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의 24개 기초자치단체들이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정부가 '특례군 제도'를 도입해 인구소멸위험 지자체를 적극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전국 24개 기초단체 중 전남지역은 구례와 곡성 2개 군이 속한다.

국민의힘 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소멸위험지역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뒤 정부와 여야당의 초당적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도 '지방소멸위험지역 지원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특례군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소규모 지자체들이 지쳐 쓰러지기 전 '특례군 지정'이라는 물을 부어 소생시켜야 한다.

/lit@kwangju.co.kr

소상공인 지원 '여수 공공배달앱' 내년 3월 출시

시·만나플래닛·소상공인회 협약 저렴한 중개수수료·지역화폐 할인

여수시가 내년 3월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공공배달앱'을 출시한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권오봉 시장과 조양현 ㈜만나플래닛 대표이사, 박기창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0일 시장실에서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및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주문배달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여수시는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수사랑상품권(6-10%할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홍보장구를 통해 시민 참여와 이용 활성화에 앞장선다.

㈜만나플래닛은 공공배달앱의 개발과 운영, 가맹점 모집을 맡고 소상공인들에게 주문금액 2% 이하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배달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수수료의 0.1%를 모객을 위한 프로모션에 사용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공공배달앱 이용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민간배



권오봉(가운데) 여수시장과 조양현(주만나플래닛 대표이사), 박기창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0일 시장실에서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 제공>

달앱에 비해 주문수수료가 매우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가맹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여수형 공공배달앱은 다음달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 가맹점 모집과 시민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권오봉 시장은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는 많은 가맹점 확보와 시민들의 이용이 필수 요건"이라며 "소상공인에게는 주문수수료 부담이 적고, 사용자에게는 여수사랑상품권 할인 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어 좋은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전 시민이 함께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민주평통 구례군협의회는 최근 구례 덕케이 지리산 가족호텔에서 전남 동부권 11개 시군 자문위원 하반기 연수를 개최했다.

민주평통 전남동부권 11개 시군 자문위원 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례군협의회(회장 서은식)는 최근 구례 덕케이 지리산 가족호텔에서 전남 동부권 11개 시군 자문위원 하반기 연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했다.

연수는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실천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특별강연과 평화통일 영상 시청, 협의회별 활동계획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2025년 보성읍에 도시가스 공급된다

740억 투입...2030년 화천·미력면 확대

보성군은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한국가스공사 이사회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2025년 공급을 목표로 총 사업비 740억원이 투입된다. 보성·장흥

(23km) 구간에는 공급배관이 설치된다.

보성군은 공공 주택·산업체 등 5990여 곳에 도시가스가 공급돼 연간 48억원 가량의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30년에는 보성읍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와 농공단지 등이 밀집한 화천면과 미력면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보성군은 2011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 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성군은 에너지 복지 차원으로 논점을 바꿔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이후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포함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 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75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